

18행정사 행정법 A형 - chopers

26.

[정답] ③

[해설]

법률행위적 행정행위 : 하명, 허가, 면제, 특허, 대리, 인가

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: 확인, 통지, 공증, 수리

27.

[정답] ③

[해설]

헌재 2011.8.30, 2009헌바128

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.

28.

[정답] ⑤

[해설]

위반된다.

29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.

③ 요건이다.

④ 고시한 날부터

⑤ 경우에 따라 실효될 수 있다.

30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기획재정부장관

③ 무상도 포함

④ 일반재산

⑤ 변상금

31.

[정답] ④

[해설]

공법관계 : ㄴ, ㄷ 사법관계 : ㄱ, ㄹ

32.

[정답] ②

[해설]

- ① 있다.
- ③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④ 있다.
- ⑤ 인정된다.

33.

[정답] ③

[해설]

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.

34.

[정답] ②

[해설]

- ① 단순히 도로 훼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관이 아니다.
- ③ 기속행위
- ④ 처음부터 효력 발생
- ⑤ 정지조건

35.

[정답] ②

[해설]

불가쟁력이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위법 여부 판단은 가능하다.

36.

[정답] ③

[해설]

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

ㄴ.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

37.

[정답] ④

[해설]

ㄴ. 허용된다.

38.

[정답] ④

[해설]

- ① 되지 않는다.
- ②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신청에 의한 경우도 포함
- ⑤ 무효인 경우 치유할 수 없고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쟁송제기전까지만 가능하다.

39.

[정답] ①

[해설]

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.

40.

[정답] ①

[해설]

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제28조(사정판결)를 준용하지 않는다.

41.

[정답] ④

[해설]

ㄴ.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42.

[정답] ⑤

[해설]

- ① 필요하지 않다.
- ② 수임기관 자신의 명의
- ③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.
- ④ 무효사유

43.

[정답] ①

[해설]

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

44.

[정답] ①

[해설]

대법원 1994.12.2. 92누14250

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,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(국세환급가산금 포함)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,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.

45.

[정답] ⑤

[해설]

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

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46.

[정답] ④

[해설]

ㄱ.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되지 않는다.

ㄴ.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될 수 없다.

47.

[정답] ①

[해설]

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.

48.

[정답] ③

[해설]

① 준용된다.

② 당사자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

④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한다.

⑤ 원고가 부담한다.

